김병기 "李 탄핵·장외투쟁은 대선 불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다.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개혁 같은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조성하겠다.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피해 받은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다"며 "국민 불안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귀연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 위한 방어수단이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한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이 안심하게끔 사법부는 내란척결에 대해 단호하며 공정하고 무엇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민생은 함께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불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조직법·개혁입법·내년도 예산안 흔들림 없이 추진"
"내란전담재판부·조희대 문제, 재판 개입이라 생각 안해"
"정청래와 관계 완전 회복…국힘 '내란 세력'에 관용 없다"

그는 취임 100일 성과에 대해서는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 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과 질의응답에서 정청래 대표와 갈등과 관련해 "제가 40년을 살아보니까 부부싸움이 친할 때 자주 싸운다. 갈라서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하더라"라며 "일부 언론에서 봉합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에 이건 알겠거니 생각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자고 말했다"며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추가돼서 얘기가 긴밀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당론 추인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내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며 "재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설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 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언론개혁 법안은 언제 처리 되느냐'는 질문에 "개혁에는 후유증이 만만찮을 수 있다. 시간을 갖겠다"며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상은 11월"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물밑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며 "대화 중심이, 저희는 민생 중심으로 하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보다는 다른 걸 우선시해 큰 진전이 없는데 민생에 대해서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에 대해 "명분이 없다. 근저에 '내란 불복'이 깔려 있으면 정말 큰일"이라며 "내란에 대해 겸허한 반성을 하고 인정하고 그 베이스에서 다른 걸 장외투쟁 내용으로 가져가면 이해하고 백번 양보하겠지만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 개편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25일까지는 무조건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한 원내 전략에 대해 "정부조직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정할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개헌 관련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기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다. 큰 담론에 들어가서 좌초되지 않게끔 기존 국민의힘 등 야당과 합의단계까지 갔던 내용들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배임죄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9월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지도부 추인을 받아서 9월 내 대체 입법을 발표한다"고 했다. /뉴시스

금융위, 5극3특 특화 자금공급 추진

이억원, 생산적금융 대전환회의서 구상 공개
150조 국민성장펀드 활용… 동남권투자공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정책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으며,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구상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지방으로 갈 경우에 금융상 이익을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낮게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특정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일종의 부담을 안는 금융제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방에 반영해 이자를 더 낮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지방에 집을 사면 수도권 보다 대출을 더 준다거나 이자를 낮게 해주면 어떤가"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사실 거의 다 잡아먹혔다"며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실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 좀 더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또는 지역 기업에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 직후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분할상환, 10년 이상, 신용점수 951~1000점)는 3.98~4.78%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3.67~4.11%로, 지방은행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지방은행이 0.96%로, 시중은행(0.36%)로 3배 가량 높았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특히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의 확충까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지방재정·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특화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금을 분산시키고,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전국을 5개 권역 거점과 3개 특화지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2차 소비쿠폰 신청… 이번엔 소득 상위 10%, 고액자산가 제외

22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 2차 소비쿠폰
직장건보료 1인가구 22만원, 4인 51만원 이하
신청 첫 주 22~26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정부는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2009년생은 목요일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함께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 가능하다. /뉴시스